
VII. 결론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고용불안정 심화, 주택마련 비용 증가,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건수 및 결혼비율이 줄어드는 한편,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차: 1955~63년 출생, 2차: 1968~74년 출생)의 은퇴시기(55세)가 2010년에 도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은 경제성장 둔화, 재정건전성 위협,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총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을 줄이는 한편,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9년 4% 중반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1인당 교육투자가 증가할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경제성장 둔화가 완화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양(+)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

보다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라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기준으로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20.5%인 반면 우리나라는 6.9%에 불과하나 동 비중은 2030년 14.4%, 2050년 20.8%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형수·전병목(2009)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은 2009년 GDP 대비 0.3%이나 2030년 1.22%, 2050년 1.64%로 확대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도 2009년 GDP 대비 0.28%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저축률 하락과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자산가격 및 수익률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실증분석 결과 은퇴가구도 양(+의) 저축을 시현하는 등 생애주기시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에 따라 자산공급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이자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실질기준으로 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드는 한편, 위험자산 회피성향 증대, 자산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와 저축행태를 은퇴 전후로 살펴볼 때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해 보인다. 먼저 가계의 저축행태를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18%로 가장 낮고 6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26.5%로 가장 높다. 이는 은퇴 이후 순자산이 부족함을 깨닫는 한편, 가계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면 실물자산(비중 79%)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현재 소득의 58.9%이나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40% 정도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중범·전승훈(2006)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가구의 65% 가량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통계청 사회조사)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51.9%가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37.6%가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중 49.7%는 근로 및 사업소득, 27.3%는 연금 및 퇴직금, 15.9%는 재산소득, 7.1%는 예금이였다. 이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인구 중 소득이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비중도 51%로 OECD 평균 30%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에 대해 공공부문과 금융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가계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공적연금, 공적건강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나 문제점은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유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직역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204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30년 이하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므로 실제로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30% 이하가 될 것이며 2009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83만

6천 원이나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동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기준소득은 360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로 구성된 연금수급자 가계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30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은 60~7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는 모수적 개혁, 완전민영화, 부분민영화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연금 개혁사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중장기 개편과 관련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공사연금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보장성(2008년 급여율이 56.6%)이 OECD 국가(평균 80%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재정수지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성이 57.5%로 전체 연령층 56.6%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65세 이상에 대해 지급한 급여비의 연도별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시행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활용을 통한 가계의 자조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이나 중증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박형수·전병목(2009)의 추계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2009년 8.1%에서 2040년 17.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저출산·고령화와 관련이 높은 항목은 노인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복지재정을 통해서 노인인구의 소득을 보조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확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을 축소하면 노인빈곤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공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노인인구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한 공공부문의 역할인데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유지, 금융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출산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의 양립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도 1995년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추월하여 2007년 현재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 전문화되어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높은 산업(생산자서비스)과 고령사회에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는 산업(사회서비스)을 선택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 등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부담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2%에 불과하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의 의무지출 비중을 늘려 재정경직성을 심화시

김으로써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고, 국가부채 규모가 커지면 통화 가치가 불안해져 금융자산을 통한 노후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금융과 가계가 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수위험과 장기자산운용위험(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금융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먼저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기채권이 기본적으로 장기국채일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신용위험을 고려할 때 장기채권을 대량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기국채와 관련하여 물가연동채권시장이 성장되어야 하며, 장기국채시장 발전의 보조수단으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계위험 및 거시경제위험과 관련하여 금융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가계위험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과 노후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표준근로자기준)을 분석한 결과(가입기간 35년),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 대체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40%대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활용하는 한편 투

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실질소득 대체율 증대)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계는 노후건강을 위해 보장성이 높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는 2002년 2,405억 원에서 2007년에 8,995억 원으로 3.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급여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어 노후건강 보장을 위해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금융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간병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정액형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공·사 협력방안, 민영부문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가 치매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로 분류되는 기준은 취급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합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의 도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인프라 개선,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거시경제위험과 관련하여 금융은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여 저축률 하락으로 부족해지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금융중개기능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신용평가 기준이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으로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요구하지 않

아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둘째, 회사채의 경우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비중은 낮은 상황이고, 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회사채의 단순증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 인수 및 증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관계대출 취급 유인이 감소하였다. 넷째,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관계대출 대신 거래대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을 중시하게 되었다. 다섯째,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도 금융증개기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금융증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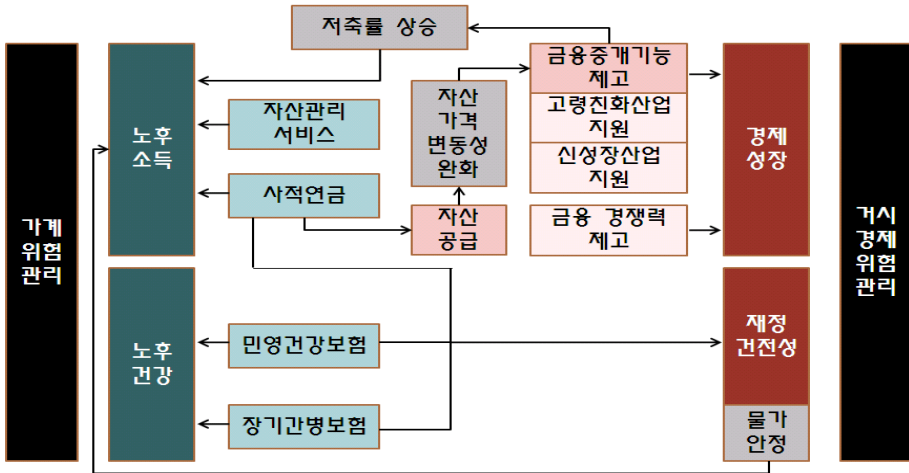
금융증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신성장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신성장산업의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금융부문이 고유의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금융부문과 정부가 위험을 공유할 경우 금융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 금융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기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서비스가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령친화산업으로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노인복지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적

정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이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러한 유인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그림 VII-1>로 도식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II-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미칠 충격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역할이라는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정리하는 한편, 공공부문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큰 그림을 충실히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차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